

전자거래(Electronic Commerce)의 현황과 과제

정반석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쏠지구적인 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전자거래(Electronic Commerce: E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거래란 기업 내부 조직간, 기업간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을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기본 조건은 정보의 전자 디지털화, 정보와 시스템의 표준화 그리고 각 시스템을 통합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쏠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결제 수단인 전자화폐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보안 문제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거래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과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산업 불개입이라는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와 관련해서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전자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민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전자거래 추진 정책이 통합성을 이루어야 하고 산업간, 기업간 그리고 전자거래의 각 분야간에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산업 정보화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약화시켜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정보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제 각 산업별, 각 기업별, 그리고 기업의 각 조직별로 이루어지던 정보화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자 거래(Electronic Commerce: EC)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본 고에서는 EC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주요 쟁점들과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발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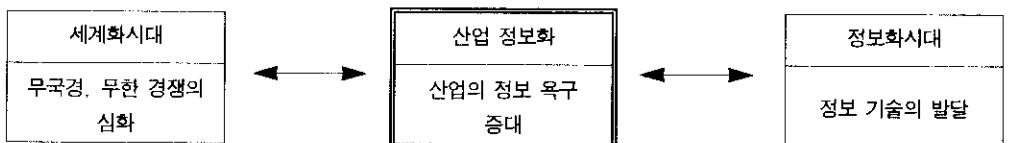
전자거래(Electronic Commerce: EC)란 무엇인가?

초기의 전자거래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제품 정보 제공과 구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온라인 시장을 주로 의미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EC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한 기업을 놓고 볼 때, 기업내 조직간,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컴퓨터나 통신망 등의 전자화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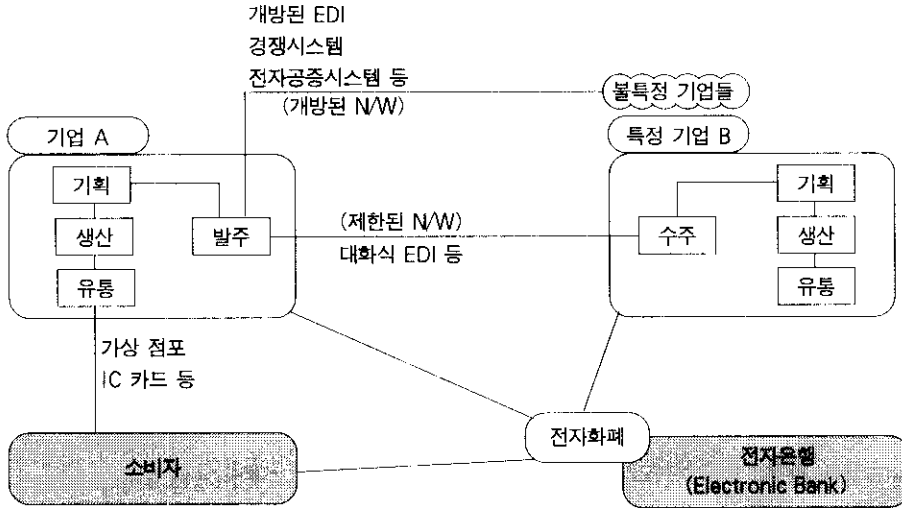
W

TO의 출범으로 대표되는 쏠지구적인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경쟁에 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분석,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용량화, 고속화, 소형화로 표현되는 전자 정보 기술의 진전은 기업과 산업의

<그림 1> 산업 정보화의 동인과 효과



〈그림 2〉 전자거래의 개념도



술을 이용하여 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이에 따라 실현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CALS라는 것이 있다.

CALS는 80년대 초반 군수에 소요되는 부품과 소모품의 보급 및 교환과 그를 위한 각종 문서 작업을 전산화하기 위한 미국방부의 프로젝트에서 출발하였다(CALS: Computer Aided Logistic Support). 그 후 CALS의 대상 범위는 제품 개발과 제조 과정의 순과정으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9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CALS가 기업 내부, 기업간, 산업간 정보 전달을 통합시키고 전자화시키는 전략을 의미하게 되었다(CALS: Commerce At Light Speed). 즉, <그림 2>에서 초기 CALS의 영역이 기업 A와 특정 기업 B와의

활동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가 그 범위가 확대되어나간 것이다. 따라서 혹자는 CALS와 EC의 의미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EC를 상위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CALS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 EC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를 다루는 것으로 구분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두 가지가 비슷한 개념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CALS가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면, EC는 민수 부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EC가 대금 결제의 전자화 개념을 더욱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그 역사도 오래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적으로 EC가 더 상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자거래를 위한 조건과 관련 이슈

전자거래가 아직은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모습일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전자거래의 대상이 다양한 경제 주체를 포함하고 개방적인 체계로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기본 조건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정보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자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초기 단계의 CALS 프로젝트에서 서류없는 업무를 목표로 한 것은 결국 이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그러한 디지털 정보가 표준화되어서 자료의 변환없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준화 문제이다. 전자화 또는 디지털화는 기업이 개별적인 의사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 표준화는 공동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향방에 따라 이해 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존에 논의되어왔던 것들과 미국 방식의 표준화 지침이 중심이 되어 부분적으로 윤곽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셋째는 표준화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와 관련된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단일한 네트워크와 호스트 컴퓨터가 감당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전화 회선이나 LAN을 하나의 통신 규약으로 연결해 사용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연결해 하나의 데이터 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 분산된 네트워크의

〈표 1〉 CALS/EC 관련 주요 표준

	명칭	대상	내용
기술 데이터	SGML: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문장	1986년 ISO에서 제정된 규정으로 문자 정보의 표준화 규격
	CGM: Computer Graphics Metafile	그래픽	문서나 차트에 사용되는 그래픽을 압축하고 교환하기 위한 표준
	IGES: 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CAD 데이터	CAD/CAM 시스템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STEP: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설계·제조 데이터	IGES 데이터를 포함하여 설계와 제조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표준
상거래 데이터	CITIS: 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발주 정보	미국방성이 계약자에게 발주 정보를 제공할 때 쓰이는 표준
	EDI(UN/EDIFACT): Electronic Data Exchange	상거래 서류	수주·발주, 견적, 재고 확인, 각종 의뢰 등 상거래에 관련된 서류의 전자화에 쓰이는 표준으로 UN/EDIFACT는 유엔과 ISO가 공동으로 제정한 표준

연결과 그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활동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제공과 상품 판매 등 인터넷 비즈니스와 인터넷 방식의 기업 전산망을 구축하는 인트라넷(intranet)의 구축이 최근 들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대용량 데이터(그래픽과 이미지 데이터 등)를 송수신할 때의 속도 문제와 뒤에 다룰 보안 상의 문제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상거래는 관세법과 외환법 상의 문제와 상관습의 차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상의 조건들이 정보의 제작과 공유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한 부가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더 들 수 있다. 첫째, 정보의 흐름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은행 구좌나 신용카드에 의한 기존의 결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타입의 온라인 실시간 결제 방식의 도입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상에서의 결제를 맡을 전자은행(또는 가상은행)과 전자화폐는 현재 가장 논의가 활발한 분야이다. 전자거래 데이터와 관련된 표준 제정이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것과는 달리 이 분야만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도 기업간 제휴를 통해 시장 확보와 표준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 회사들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과 제휴하여 전자화폐의 개발을 진행해왔는

데, 최근에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

둘째, 개방된 네트워크 속에서 기업과 개인의 정보뿐 아니라 화폐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보안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은 현재 별도의 영역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이 역시 미국 기업들이 기존의 군사 부문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간 국방 전략 상의 이유로 암호 기술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던 미국이 작년 5월부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화하고 있어 보안 기술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미국의 추진 사례

처음으로 CALS를 시도했고 전자거래 부문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은 현재에도 표준의 제정과 네트워크의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국방성의 CALS국과 상무성의 전자거래사무국(FECAPMO)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자금 지원을 수행한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중간 창구 역할을 산업조종그룹(CALS-ISG)과 전자거래센터(ECRC)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방성과 상무성이 지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이 상무성으로 옮겨간 점이다. 이것은, 군수 부문에서 경험한 CALS의 효과를 민간에 확산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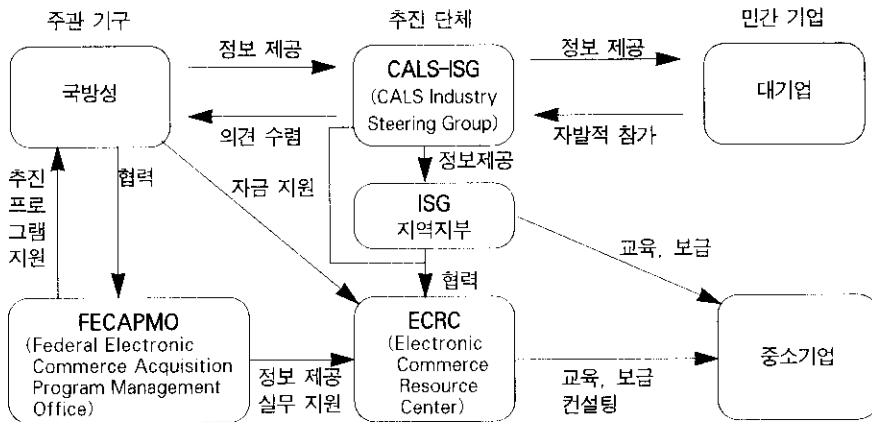
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구체화된 실행 계획은 '1997년부터 정부의 조달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EDI화하여 전자거래의 모범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시행 사항은 1994년 10월에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조달효율화법」에 담겨져 있다. 여기에는 납품 업체 30만 개에 연간 2,000억 달러가 넘는 정부 조달 부분을 1997년 1월부터 연방조달망(FACNET)을 통해 EC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1995년에는 일부 연방 관청과 지방 정부 사무소의 조달 공고가 인터넷에 실리기도 하였다. 여기에 납품 희망 업체는 전자 우편으로 입찰 참가를 신청하지만 실제 입찰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져 전자제

래의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정부 조달의 70% 이상이 중소기업과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ECRC를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전자거래 확산에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커머스넷(CommerceNet)이다. 커머스넷은 정보 통신 및 금융 회사들과 각종 단체들이 공동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 발주, 수주 및 대금 결제를 추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995년까지 90여 개사가 참여했던 것이 현재는 약 160여 개의 기업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커머스넷은 실질적인 전자거래를 실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접속과 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금결제시스템의 구축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와 통신 사업자의 재정 지원을

〈그림 3〉 미국의 CALS 추진 흐름도



자료: 타이아몬드社, 「CALS의衝擊」, 「해바디 비즈니스」, 1995. 9.

받아 여섯 개의 실무 그룹을 두고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커머스넷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재정 지원까지 하는 이유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각 분야의 표준화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그밖에도 가상 점포와 은행이 연계된 대금 결제 수단을 가지고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는 Fast Virtual, Cyber Cash, Digital Cash 등이 있으나 아직은 참여 기업도 소수에 불과하고 시스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금융 기관, 신용카드 회사, 정보 통신 회사 및 연방 정부가 참여하여 기업 이용자와 일반 사용자들의 결제시스템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FSTC(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Cooperation)가 있다.

한국 산업의 정보화

전자거래체계의 구축은 곧 산업 정보화를 의

미하며 이는 개인과 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보화 토대를 필요로 한다. 기본적인 정보화 부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낮은 기기 활용도를 보이는 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표 2> 참조). 전반적으로 낮은 정보화 수준은 그간 산업 정보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반적으로 낮은 정보화 수준과 함께 산업 정보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들의 정보화 마인드는 전산 작업에 투자하는 비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1994년도에 국내 상장 기업의 전산 비용⁹⁾ 지출은 평균 5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0.38%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산 인력은 평균 16 명으로 종업원 수 대비 1.6%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수준은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0.8% 이상

<표 2> 주요국의 정보화 수준(1993년)

(단위: 달러)

구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1인당 정보 통신 기기 내수액	656	720	468	433	411	271
1인당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액	483	508	523	499	525	176
1인당 정보 처리 서비스 매출액	706	466	435	379	401	36

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5.

주: 정보 통신 기기: 컴퓨터, 통신 기기 및 부품.

정보 통신 서비스: 기간 통신 서비스와 부가 통신 서비스 등의 네트워크계 서비스.

정보 처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 제작과 자료 처리 서비스 등 비네트워크계 서비스.

을 전산 비용에 지출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하다. 절대적인 비용 지출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 볼 때도, 기업들의 정보시스템 구축은 경영 관리, 전략 계획, 의사 결정 등 고도화된 업무에 대한 지원체계를 위한 것들보다 일상적인 업무의 전산화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전자거래 추진 현황

이상과 같은 정보화 기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전자거래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업의 시도가 시작되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통상산업부

와 정보통신부에서 전자거래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통상산업부의 '산업정보전산망'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DB 개발을 추진하고, EDI나 CALS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표준화 작업, 시범 사업 및 보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전자거래는 2000년부터 보급을 확대하여 2005년에는 수산업에 완전히 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1996년 1월에는 전자, 항공 방위 산업, 원자력, 제철, 중공업, 전력, 통신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CALS 시범 사업자를 선정하여 이

〈표 3〉 상장 기업의 전산 비용 지출(1994년)

업종	매출액 대비 전산 예산(%)	종업원 수 대비 전산 인력(명)	전산 인력 1인당 기기 구입비(백만 원)
전체 (223개 업체)	0.38	1.6	59
어업, 광업, 음식료	0.06	0.8	9
사무 기기, 자동차	0.37	1.0	46
건설	0.19	1.5	38
금속, 기계	0.24	1.4	27
목재, 제지, 가구	0.05	0.8	7
은행, 보험	1.40	3.0	95
화학	0.12	2.2	29
영상, 통신	0.14	0.8	15
섬유, 피복, 피혁	0.38	0.8	46
증권, 증권	1.10	4.1	67
도소매업 및 기타	0.08	1.1	23

자료: 「경영과 컴퓨터」, 1995. 1.

1) 정보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산정하였음.

를 통한 CALS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주요 표준 제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에는 중소기업의 CALS/

전자거래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민간의 전자거래 추진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신용카드 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상품 유통과 금융 결제를 혼합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통신 서비스 업체 가운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한국통신은 기존의 EDI 서비스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거래의 영역 확대를 모색 중이다. 그리고 데이콤은 기존의 PC 통신과 EDI, 전자우편 등을 결합한 전자거래 서비스를 4월부터 실시했으며, 이후 각종 유통·무역·운송 분야의 VAN과 접속하고 1997년부터는 전자화폐 개념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관 합동의 전자거래 추진 노력 역시 최근에 와서 구체화되고 있다. 1996년 1월에 통상산업부 주관 하에 정부 투자 기관, 업종별 단체, 주요 제조 업체들이 참가하여 '한국 CALS/EC협회'가 창립되었다. 여기에서는 CALS연구조합을 두어 기술 개발과 표준 작업을 공동 연구하고 전자거래지원센터를 두어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동년 2월에는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한국 CALS/EC기술협회'가 창립됐는데 여기에서는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및 CALS와 EC의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거래의 확립을 위한 과제

이상과 같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CALS/전자거래 추진 노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통합성과 균형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통합성 측면의 문제점은, 부처간의 정책 연계가 부족하고 때로는 정책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자거래 또는 산업 정보화와 관련된 망 구축에 있어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보고속도로 구축 계획과 통상산업부가 구축하고자 하는 산업정보망의 연결성이 부족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兩부처가 민간 부문과 전자거래를 추진한다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정책이 통합되지 못하고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통상산업부는 '한국CALS/EC협회'를, 정보통신부는 '한국CALS/EC기술협회'를 각각 주관하고 있다. 전자가 전자거래시스템 수요자라면 후자는 공급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분된 의견은 특히 표준화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물론 상반된 입장에서의 접근이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조직에서 이루어져야 더욱 실현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둘째,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균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전자거래 확대 정책은 주로 제조업과 일부 대형 기간 산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은 군수 기업과 정부, 그리고 기간 산업의 기업간 거래에 중심을 둔 것이다. 즉,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거의 외면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유통 부문을 경시하는 정부의 산업 정책에 기인한다. 사실 그간 전자거래에 대한 산업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정부가 최근에 각종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제조업 기업간 거래와 정부 조달 부문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CALS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업 정보화 추진 전략에서 '전자거래'라는 용어 보다는 'CALS'라는 용어가 주로 등장한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최종 경쟁은 결국 시장에서 최종 소비자에 의해 결정된다.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지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와의 접촉 채널이 정보화되지 않으면 경쟁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 서비스 및 전자화폐에 대한 추진 정책이 부족한 것도 불균형성의 하나이다. 균형적인 산업 정책 측면에서 또 하나 부족한 것은 對중소기업 정책이다. 기업에 대한 전자거래 확대 방안에서 정부는 대기업 위주로 시범 사업자 선정과 관련 협회를 이끌어내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을 재원으로 한 자금 지원이 주요 정

책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소기업은 정보화 수준도 낮을 뿐 아니라 전자거래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컨설팅 및 기술 교육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간 정보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외에, 네트워크 상의 보안 문제가 소홀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보안 문제에 핵심이 되고 있는 암호 기술은 선진국을 통해 들여올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술 수출국이 안보 문제와 연계하여 기술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스템 수요자와 공급사가 동시에 참가하는 보안 기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전자거래시대에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이다. 전자거래가 본격화되면, 화폐와 상품의 흐름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2년 기업간 거래되는 EDI문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 분야에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간의 거래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기업과 기업간에 일어나는 계약의 증명과 세무 관계 및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소재 등 전자거래에 관련된 법·제도가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